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 정치와 숙청

- 권력투쟁 배경 및 유형의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

유동궁*

1. 서론: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 이론적 고찰
3. '56년 8월종파사건
4. '67년 갑산파 숙청
5. '97년 황장엽 망명
6. '13년 장성택 숙청
7. 북한 권력투쟁 배경의 지속과 변화
8. 결론: 연구의 정책적 함의

1. 서론: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수령제, 전체주의 등¹⁾ 북한 정치권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들을 살

* 육군사관학교 정치학 강사

- 1)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1; 장달중 편, 『현대북한 학강의』, 사회평론, 2013.

펴보면, 북한에서는 숙청이 필요 없다. 독재자를 중심으로 권력엘리트와 전 사회가 유기체처럼 단결해 있는 전일적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3년 12월 장성택이 갑작스레 숙청·처형되었다. 왜 숙청되었을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수령제의 내용처럼 권력이 수령에게 완벽히 집중되어 있고, 수령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조직들(공산당, 국가기구, 군 등)과 담론들(주체사상,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이 사회적으로 뿌리내려 있다면, 전체주의에서와 같이 전지전능한 지도자와 무장력을 독점한 정권, 공포적인 감시시스템에 의해 사회가 통제된다면, 이견을 제시하거나 정권에 도전하는 자는 없을 것이며, 독재자는 숙청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시기별로 숙청이 지속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수령제 등을 보완하는 북한 정치권력에 관한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바로 ‘권력투쟁’의 관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북한에서 수령의 권력이 얼마나 공고한지가 아니라, ‘왜 숙청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수령제 등 북한 정치권력에 관한 일반적 설명을 부정하기보다는, 수령제라는 거시적인 권력관계 틀 속에서도 수령과 엘리트, 또는 엘리트들 간에 갈등요소들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즉, ‘권력투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단과 결과로서 숙청이 발생하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권력투쟁의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일관성 있는 ‘갈등구조와 논리’가 발견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대상과 방법을 선정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으로는 '56년 8월중과사건, '67년 갑산과 숙청, '97년 황장엽 망명, '13년 장성택 처형을 선택하였다. 주지의 사실 이듯, 이 숙청 사건들은 시기별로 북한 정치권력의 변동이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북한 정권 내 존재하는 갈등이 표면화되었던 사건들이었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에는 복수사례연구를 사용하였다. 북한이라는 단일 정권 내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들 - 숙청사건들 - 을 통시적

으로 살펴보았다. 각 숙청을 통해 들어난 권력투쟁의 배경과 유형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각 사례별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권력투쟁의 배경과 유형에 있어서 지속성과 변화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표 1) 북한 정치권력에 관한 기존연구2)

구 분	'40년대-'60년대		'90년대-'00년대	'10년대
	8월총파사건	'60년대 숙청	황장엽 망명	장성택 처형
정치 중심	이종석(1995)		김근식(1999)	정성장(2014) 정창현(2014)
	서동만(2005)			
	백학순(2010, 2015)			
경제(정책) 중심	김연철(2001), 이태섭(2001)			박형중(2014a, 2014b)
	이정철(2002)			

북한 정권에 관한 기존연구는 <표 1>과 같이 다양하다. 기존연구들은 연구중점과 시기 및 사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기존연구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보완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연구들은 북한에서 권력, 권력투쟁, 숙청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개념화하지 않았다. 또는 당연시하여 생략하였다. 둘째, 기존연구들에서 논의의 초점은 ‘북한에서 수령의 권력이 얼마나 공고해졌는지, 북한이 얼마나 전일적인 체제로 발전했는지’에 있었다. 따라서 북한 정치에서 권력투쟁이 점

2) 김근식,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과 당내갈등」, 『통일문제연구』 통권 32호, 평화문제연구소, 1999;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박형중,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한국과 국제정치』 30권 1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4a; 박형중, 「수령독재 하에서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동학 그리고 장성택 숙청」, 『북한연구학회보』 18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14b;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세종연구소, 2010; 백학순, 『김정은 시대의 북한정치 2012~2014: 사상·정체성·구조』, 세종연구소, 2015;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긴장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역사비평사, 1995;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들녘, 2001; 정성장,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국방연구』 57권 1호,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14; 정창현, 「장성택 사건 숨겨진 이야기」, 선인, 2014

차 사라진 것처럼 묘사하였다. 이러한 설명과 묘사는 수령의 절대성과 이에 따른 정권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이후에도 북한에서 숙청이 간간히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셋째, 기존연구들은 시기 별, 사례별로 분리되어 있었다.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기에 관한 개별적 연구 성과들은 존재하지만, 전 시기와 사례를 연결하여 분석적으로 비교한 연구, 북한 권력투쟁의 발생배경과 유형에 있어 일괄된 논리를 찾으려한 연구는 적었다. 이러한 특징은 마치 게디스(Geddes) (1999)와 한병진(2009)이 언급한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정치, 체제 이행, 권력엘리트 내부 투쟁에 관한 이론적 일반화의 부재”와 일맥상통한다.³⁾ 넷째, 기존연구들은 북한 권력투쟁에 대해 정치 또는 경제의 어느 한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여느 공산정권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정치, 경제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투쟁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정한 본 논문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권력, 권력투쟁과 숙청의 개념을 제시하고,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3장부터 6장까지는 각 숙청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권력투쟁의 배경을, 즉 갈등의 맥락을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살펴본다. 이때 정치와 경제(정책)의 양 측면에서 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권력투쟁에 관해 상대적으로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7장에서는 각 사례별 연구결과를 연결하여, 권력투쟁의 배경에 있어 일괄된 갈등구조와 논리가 있는지 검토한다. 8장에서는 연구결과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3) Barbara Geddes, “Authoritarian Breakdown: Empirical Test of a Game Theoretic Argumen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Meeting, (1999. 9), pp.1-2;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15권 1호, 세종연구소, 2009, 120쪽.

2. 이론적 고찰

가. 권력투쟁의 유형과 배경

권력투쟁과 속형이란 무엇인가? 권력투쟁이란 광의에서 정치와 같다. 정치란 “희소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권력’이라는 수단을 장악·분배·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란 곧 권력투쟁 그 자체이다.⁴⁾ 한편 협의에서 권력투쟁은 권력집단 내부 지도자와 엘리트 간 또는 엘리트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⁵⁾

〈표 2〉 권력투쟁의 유형

양상	체제타파 여부	공개 여부	투쟁 수단	투쟁의 대상
	체제내적/외적	공개/비공개	평화적/강제적	정치적/관료적

이러한 권력투쟁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기존 체제의 타파를 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체제 내적’ 또는 ‘외적’ 투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개 여부에 따라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 투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주의나 독재 정권에서는 민주주의에서처럼 선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경쟁할 수 없기에 권력투쟁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한편 권력투쟁은 의존하는 수단에 따라 ‘평화적’ 또는 ‘강제적’ 투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평화적 수단에는 언론·선거·의회활동 등이 있으며, 강제적 수단에는 쿠데타·혁명·암살·처형 등이 있다.⁶⁾ 또한 권력투쟁은 대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정치적’ 또는 ‘관료적’ 투쟁

4) Andrew Heywood, 조현재 역, 『정치학: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36쪽.

5) Milan W. Svoblik, "Power sharing and leadership dynamics in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2 (2009), pp.477-494.

6) Doopedia 두산백과, “권력투쟁”,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56762(검색일: 2017. 3. 30).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⁷⁾ 정치적 투쟁은 최고권력자와 갈등하는 것이고, 관료적 투쟁은 최고권력자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 간, 권력자의 목인 하에 경쟁하는 것, 즉, 충성경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숙청이란 무엇인가? 숙청은 “독재정당이나 비밀결사 내에서 조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대자를 추방하여 조직의 순화를 도모하는 일”을 말하며,⁸⁾ 해임, 강등 등 평화적 방식과 암살, 처형, 구금 등의 강제적 방식이 있다. 특히, 숙청은 전체주의에서 정적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스탈린하 소련과 모택동하 중국에서 대규모의 체계적인 숙청이 진행됐기 때문이다.⁹⁾ 결국 숙청은 권력투쟁의 수단이자 결과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정권에서 권력투쟁과 이에 따른 숙청은 어떤 배경 아래 발생했는가? 결론적으로, 권력투쟁은 ‘권력 원천(source of power)’의 장악, 분배, 행사를 둘러싸고 발생했는데, 권력의 원천이란 무엇인가?

코르나이(János Kornai)에 따르면 전형적 사회주의(classical socialism)에서 권력의 원천은 권력제도·권력구조(institutions of power, structure of power 이하 권력구조)와 이데올로기(ideology)이다.¹⁰⁾ 여기서 권력구조란 ‘권력의 소재’에 관한 것으로, “한 정부, 조

7) 김근식, 앞의 논문.

8) Doopedia 두산백과, “숙청”,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6097&cid=40942&categoryId=31645>(검색일: 2017. 3. 30).

9)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숙청”,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8317&cid=42140&categoryId=42140>(검색일: 2017. 3. 30).

10) 코르나이(Kornai 1992)에 따르면 사회주의 체제에 세 가지 원형(prototypes)이 존재하는데, 첫째, 혁명적 이행 체제(revolutionary transitional system)이고, 둘째 전형적 체제(classical system)이며, 셋째 개혁 체제(reform system)이다. 만약 세 가지 원형 이후 체제변화가 발생한다면, 이는 탈사회주의 체제(post-socialist system)일 것이다. 코르나이는 1992년 저술 당시 북한과 쿠바를 개혁 체제로 이행하지 않은 ‘전형적 체제’로 분류하였으며, 현재의 북한은 여전히 전형적 체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Já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9.

직 또는 사회 내에서 개인들 간에 권력이 배분되어 있는 방식”¹¹⁾을 의미하며, 개인이나 조직의 정치·행정적 역할과 권한, 이들 간의 권력관계, 이들을 선출하는 방법, 임기 등과 관련된 제도들을 내포한다. 공산주의 정권에서 권력의 정점은 공산당이기에 때문에, 특히 ‘공산당 내 권력구조’, 즉, 공산당 내 개인과 조직 간에 권력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가 핵심적인 권력의 원천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는 “권력주체의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 가치체계, 관념”¹²⁾, “조직화된 정치행동에 하나의 토대를 제공해주는 일관성 있는 관념들”¹³⁾을 의미한다. 이데올로기는 개인이나 조직 간에 또는 국가와 사회 간에 존재하는 권력배분 구조의 타당성을 설명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대한 충성을 고취시키는 ‘정당화의 기능’을 수행하며,¹⁴⁾ 따라서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그 해석권을 장악하는 것은 공산주의 정권에서 매우 중요한 권력의 원천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은 이데올로기가 목표로 하는 현실의 구체적인 반영으로서, 정책의 성공은 정책을 제시한 권력주체와 정책의 기반이 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이고, 반대로 실패는 권력주체와 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킨다.¹⁵⁾ 따라서, 정책 역시 중요한 권력의 원천인 것이다.

11) G. William Domhoff, Thomas R. Dye, Power Elites and Organizations, Sage Publication,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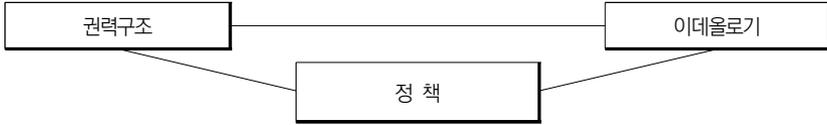
12) János Kornai, 앞의 책, p.33.

13) Andrew Heywood, 조현재 역, 앞의 책, 91쪽.

14) 김달중·스칼라피노, 『아시아 공산주의의 지속과 변화: 중국, 북한, 베트남』, 법문사, 1989, 40쪽.

15) 박명희, 「중국공산당의 당내권력투쟁에 대한 연구」, 『중국』 18권, 단국대 중국연구소 1991, 35~68쪽.

〈표 3〉 공산주의 정권에서 권력의 원천 : 권력투쟁의 배경



이상 상술한 권력의 원천을 둘러싸고 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세력들이 경쟁하였다. 소련의 스탈린은 1924년 레닌 사후 차기 권력구조를 두고 트로츠키, 부하린 등과 경쟁했으며,¹⁶⁾ 이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강력한 개인숭배와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한편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는 탈스탈린화를 통해 기존 스탈린주의 노선을 비판하고, 권력구조를 개인독재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환원시켰다. 또한 정책 측면에서 스탈린은 공업화의 속도 및 내용과 관련하여 트로츠키나 부하린의 우파와 갈등하기도 하였으며, 중국에서도 역시 모택동과 등소평의 좌·우파가 대립하였고, 등소평의 승리로 모택동의 장기집권이 차단되고, 개혁개방이 시작되었다.

나. 연구의 분석틀

이상 권력투쟁, 숙청의 개념 및 유형과 실존 공산국가에서 권력투쟁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상술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아래 〈표 4〉와 같이 연구의 분석틀: 권력투쟁의 배경과 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¹⁷⁾ 그리고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북한 권력투

16) John M. Thompson, 김남섭 역,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사회평론, 2004, 317~319쪽.

17) 여기서 유형을 ‘체제타파 여부’와 ‘투쟁의 대상’으로만 한정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권력투쟁의 배경 분석을 토대로 각 사례별로 ‘체제타파 여부’와 ‘투쟁의 대상’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앞서 살펴본 ‘공개 여부’나 ‘투쟁 수단’ 등은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의 특성상 그 근거를 찾거나 그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분석틀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체제내적이나 외적이라는 기준은 ‘공산주의’라는 정치경제체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예를 들어, 공산주의를 타파하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나 서구식 시장경제체제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있었

쟁의 배경과 유형에 있어 지속성과 변화를 확인할 것이다.

〈표 4〉 연구의 분석틀: 권력투쟁의 배경과 유형

배 경	권력구조 변경	이데올로기 논쟁	정책 대결
유 형	체제타파 여부		투쟁의 대상
	체제내적/외적		정치적/관료적

3. '56년 8월종파사건

‘8월종파사건’은 “1956년 8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연안파 윤공흙 등이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려 했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¹⁸⁾ 이 사건은 “북한 역사상 유일무이한 조직적인 반 김일성 운동”이었으며,¹⁹⁾ 김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 인사를 1958년까지 숙청하고, 1961년 9월 4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²⁰⁾

가. 8월종파사건의 배경

1) 권력구조 변경: 파벌정치의 해체와 김일성과 중심 단일체제 형성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산주의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

다든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고 서구식 자유주의나 인권 등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든지 한다면, 이는 체제외적인 투쟁인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의 변형인 수령제나 ML주의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유일사상체계(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등)에 반대하고 집단지도체제나 ML주의로의 회귀를 옹호한 경우라면, 이는 체제내적인 것으로 보았다.

18) 통일교육원, 『2017 북한 이해』,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30쪽.

19) 백학순, 앞의 책, 2010, 359쪽

20) 장달중 편, 앞의 책, 164~180쪽.

력의 원천은 ‘공산당 내 권력구조’이다. 8월종파사건은 김일성이 공산당 내 권력구조를 ‘파별연합’에서 ‘김일성과 중심 단일체제’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그 반발로 발생했다.

해방 직후 북한 정권에서는 여러 세력이 경쟁하고 연합했다. 어느 세력도 단독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북한 정권 초기 조선노동당 내 권력구조는 파별 간의 연합을 떨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는 1946년 창당 당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특히 정치위원회 및 상무위원회(이하 정치위 및 상무위)의 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당의 최고 권력기구는 중앙위였으며, 이 중에서도 중앙위가 선출하는 상무위와 정치위가 핵심적인 의결기구였다. 당은 집단지도체제와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상무위와 정치위 위원 구성은 각각 김일성과 2명, 1명, 연안파 6명, 2명, 소련파 2명, 1명, 국내파 3명, 1명으로 파별 간의 안배가 이루어져 있었고, 연안파가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중앙위 위원장은 연안파의 김두봉이었고, 부위원장은 김일성과 국내파의 주영하가 맡고 있었다.²¹⁾

그런데 이러한 파별 연합구조가 김일성과 중심의 단일구조로 변경되기 시작하였다. 그 계기는 6.25전쟁과 1953년 8월 조선노동당 6차 전원의회의였으며,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3차 당대회를 통해 결정적으로 강화되었다. 상무위원 11명 중 5명이, 조직위원 7명 중 3명이 김일성과였으며, 실제로 다른 파별 소속 위원들까지 포함하면, 상무위원 11명 중 8명이, 조직위원 7명 중 7명 전원이 김일성 지지자였다. 당위원장에는 김일성이, 부위원장에는 모두 김일성 지지자들이 선출되었다.²²⁾

한편, 김일성과가 당을 장악해나가면서,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고조되었다. 김일성의 과거 항일경력이 과장·미화되고, 수령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집단지도체제와 민주집중제를

21) 이종석, 앞의 책, 1995, 194~197쪽.

22) 이종석, 위의 책, 1995, 271~273쪽.

저해하는 것이었다.²³⁾ 결국, 김일성과 중심의 권력구조 변경은 김일성 비판 세력에게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었고, 권력으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반김일성 세력은 1956년 2월 소련 20차 당대회에서의 스탈린 비판에 편승하여 1956년 6~7월 김일성의 동구권 순방 기간 반김일성운동을 본격화하면서, 8월총파사건을 도모하였던 것이다.²⁴⁾

2) 이데올로기 논쟁: 주체 확립 對 교조주의·형식주의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는 현존하는 권력구조와 정치체계를 정당화하거나, 권력구조의 변동을 위해 사람들을 행동하도록 고무시키는 핵심적인 권력의 원천이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데올로기는 중요한 권력의 원천이었으며, 김일성파는 권력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권력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르크스-레닌주의(이하 ML주의)의 해석과 적용을 문제 삼아 반김일성파와 논쟁하였다.

논쟁의 중심에는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 확립’ 문제가 있었다. 이는 소련의 ML주의를 원론적으로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 현실에 맞게 적용할 것인지, ‘계승성 대 독창성’에 관한 논쟁이었으며, 그 본질은 반김일성파에 대한 김일성파의 공격이었다. 주체 확립 문제가 제기된 것은 6.25전쟁 중이었다. ‘주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일성은 1952년 당원들에게 “우리나라 정세에 부합되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고,²⁵⁾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다른 파벌들, 특히 소련파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⁶⁾

23) 이종석, 앞의 책, 1995, 147~149쪽; 백학순, 앞의 책, 2010, 287~289쪽.

24) 이종석, 위의 책, 1995, 275~276쪽; 서동만, 앞의 책, 2005, 553쪽.

25) 김일성,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김일성선집』 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331쪽.

26) 서동만, 앞의 책, 520쪽.

결국, 6.25전쟁 기간 중 무정, 허가이, 박헌영 등이 숙청되었다.

전후에도 ‘주체 확립’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갈등이 공식화 된 것은 1955년 12월 당 선전선동일꾼을 대상으로 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였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박창옥, 박영빈 등 소련파 인사들이 “교조주의”에 얽매어 “모든 사업에서 기계적으로 소련의 본을 따”고 있으며, “ML주의를 소화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째로 집어 삼키고” 있고, 전후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련을 따라 “한반도 긴장완화나 미제국주의 반대구호 중지” 등을 주장했다고 비판하였다.²⁷⁾

결국 김일성은 ‘교조주의’ 문제를 통해 소련파 박창옥이 관장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여 1956년 1월 당 중앙위 상무위에서 박창옥을 정치위원으로부터 제명하는데 성공했다.²⁸⁾ 또한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의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련파 숙청을 지속하였다. 한편, 스탈린 비판 이후 개최된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3차 당대회에서는 소련·연안파의 기대와 다르게 김일성 개인숭배에 대한 어떤 언급도, 파벌연합 구조로의 그 어떤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김일성과 중심 권력구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결국 반김일파는 8월중파사건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3) 정책 대결: 중공업 우선 정책 對 균형정책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은 이데올로기가 목표로 하는 현실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며, 그 성패는 이데올로기의 타당성과 권력행사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친다. 김일성과 반김일성과는

27)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9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468~475쪽.

28) 이종석, 앞의 책, 1995, 72쪽; 백학순, 앞의 책, 2010, 286쪽.

전후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공산주의가 제시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발전정책에 있어 대립하였고, 그 대결의 과정이자 결과로서 8월중과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쟁점을 둘러싸고 정책적으로 경쟁하였는가? 로웬탈(Lowenthal)에 따르면, 저발전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책은 유토피아(집단적, 공산주의적 목표) 대 발전(실용적, 개인적, 자본주의적 목표)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두고 갈등하다가, 결국 발전을 택하게 됨으로 탈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귀결되는데,²⁹⁾ 이러한 갈등은 북한에서도 존재했으며,³⁰⁾ 특히 전후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우선순위’에서 이러한 갈등양상이 나타났다.

김일성파의 ‘투자우선순위’ 관련 정책은 1953년 결정된 ‘중공업 우선 정책’이었다. 중공업 우선 정책은 집단주의적인 스탈린식 발전모델을 따른 것으로, 경제건설 초기 투자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공업, 농업 등 소비재보다는 중공업 등의 생산재 부문에 자원을 우선 투자하여 일정 기간 내에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이었다.

‘중공업 우선 정책’이 결정되자, 당내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뒤 따랐다. 그 중심에는 단연 박창옥 등 소련파와 윤공흠 등 연안파가 있었다. 이들은 1953년 3월 스탈린 사후 소련이 소비재 중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고무되어, 전후 피폐화된 주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재 공급이 절실하며, 따라서 소비재 부문을 우선 발전시켜야 한다는 ‘균형정책’을 주장하였다.³¹⁾ 이러한 주장을 제기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중공업 우선 정책이 중공업 투자자원 마련을 위해 소비영역과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것 - 배급제, 협상가격차, 대중동원, 저임금 - 이었기 때문이었다.³²⁾ 이와

29)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Charlmers Johnson eds, Change in Communist Systems(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p.50-54.

30) 이태섭, 앞의 책, 18쪽; 김연철, 앞의 책, 64쪽.

31) 이종석, 앞의 책, 1995, 264쪽.

32) 김연철, 앞의 책, 65~71쪽.

관련하여 윤공흠은 “김일성이 독재적이고, 그의 정책이 반인민적이며,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이 너무 적으며, 농민들에 대한 대우가 가혹하고, 인민군 장교들의 봉급은 매우 높아, 김일성의 정책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³³⁾

따라서 중공업 우선 정책은 진퇴를 거듭하였다. 1953년 김일성은 소련·중국 방문 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 부문의 공장들을 확장·신설할 것이라 언급했고,³⁴⁾ 이에 1954년 3월 박창옥, 최창익 등 소련·연안파 인사들이 국가계획위원장, 재정상 등에 임명되었다.³⁵⁾ 또한 중공업, 경공업, 농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 1954년 4월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3개년 계획’과 법령에 반영되었으며, 법령은 “식료품과 공업품의 배급제를 철폐하고 자유상업으로 이행하기 위한 온갖 필수조건들을 조성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³⁶⁾

그러나 상술한 정책 조정 과정은 1954년 11월 경공업 중시 세력인 최창익 재정상이 해임됨으로써, 다시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 “중공업의 우선적인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킨다.”라는 ‘전후 경제발전의 총노선’이 정식화됨으로써 김일성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물론 이 방식은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절충안이었다. 따라서 이후에도 탈스탈린적 국제공산주의 흐름에 편승한 연안파와 소련파의 불만은 지속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불만이 8월중파사건으로 폭발하였던 것이다.

33) 김창순, 『북한15년사』, 지문각, 1961, 156~157쪽.

34) 김일성,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제국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의 사업경과보고」, 『북한연구자료집』 2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35) 김연철, 앞의 책, 77쪽.

36) 서동만, 앞의 책, 608~610쪽.

나. 8월종파사건의 유형

이상 배경 분석을 토대로 본 사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8월종파사건의 배경과 유형

유형	체제타파 여부	투쟁의 대상
	체제 내적+외적	정치적

먼저 이 사건은 ‘체제 내적’인 성격이 강한 권력투쟁이었다. 즉, 갈등이 ML주의 담론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일성파와 반김일성파는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라는 틀 속에서 당내 권력구조 변경 측면에서 ‘김일성파 중심의 단일체제’나 ‘파벌 간의 연합: 집단지도체제’이냐를 두고 경쟁하였고, 이데올로기 논쟁 측면에서는 ML주의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ML주의를 원론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ML주의를 북한 현실에 맞게 적용할 것인가?’, ‘스탈린 사후 소련의 변화(탈스탈린화)를 받아들이는 것인가, 스탈린주의를 고수할 것인가?’ 즉, 주체 확립 문제를 두고 경쟁하였다. 다만, 정책 대결 측면에서는 체제 외적인 면이 있었다. 스탈린식 ‘중공업 우선주의’와 탈스탈린식 ‘균형정책’이 경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8월종파사건은 정치적인 권력투쟁으로서 김일성파에 대한 반김일성 세력(연안·소련파 인사 일부)의 도전이었다.

4. '67년 갑산파 숙청

1967년 갑산파³⁷⁾의 숙청은 1967년 5월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4기

37) 일제 식민지 시기 만주 장백현과 조선 함경북도 갑산군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던 국내 기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로서, 만주를 기반으로 했던 김일성파와 연계하여 ‘재만한인조국광복회’ 지부를 설립하고, ‘갑산공작위원회’라는 공산주의 단체를 조직했으며, 해방 이후부터 만주를 기반으로 한 김일성파와 함께 북한 정치를 주도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갑산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896 &cid=46629&categoryId=46629](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896&cid=46629&categoryId=46629)(검색일: 2017. 4. 11).

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파 출신 당 조직, 사상, 문화 분야 담당자인 박금철, 이효순, 김왈룡, 허석선, 이송운, 허학송 등이 온갖 기회주의: 봉건주의, 교조주의, 자본주의, 수정주의 등을 구실로 숙청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 북한 정권의 기본적 특징인 강력한 개인독재, 소위 수령제 또는 유일사상체계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고도의 개인 숭배가 형성되었다.

가. 갑산파 숙청의 배경

1) 권력구조 변경: 김일성 및 만주파 중심 권력구조 구축과 후계구도 문제

김일성과 내부에는 두 개의 계파가 존재했다. 하나는 만주파이며, 다른 하나는 갑산파이다. '67년 갑산파 숙청은 조선노동당 내 '김일성과 중심 권력구조'에서 갑산파가 배제되고, '김일성 개인 및 만주파 중심 구조'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만주파 중심 권력구조 변경은 1961년 4차 당대회에서 시작되었다. 이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구성을 보면, 김일성파가 37명, 연안파 3명, 소련파 1명, 국내파가 44명이었으며, 37명 중 30명이 만주파, 6명이 갑산파,³⁸⁾ 1명이 김일성 인척(김영주)이었고, 중앙위 부위원장 5명 중 3명이 만주파, 2명이 갑산파, 정치위원 11명 중 4명이 만주파, 2명이 갑산파, 연안파와 소련파가 각각 1명, 국내파가 3명이었다.³⁹⁾

이후 권력구조 변경은 1966년 제2차 당 대표자회의 중앙위 제4기 제 14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 졌다. 김일성 개인권력이 강화되는 조치로 “당 중앙위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가 총비서제 및 비서 직제로 개편되었고, 비서국이 신설되었다.”⁴⁰⁾ 총비서제와 비서국 신설은 김일성으로

38) 박금철, 이효순, 이송운, 허학송, 김왈룡, 허석선이다.

39) 이종석, 앞의 책, 1995, 288쪽.

4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4차 전원회의에 대한 보도」, 『로동신문』 1966. 10. 13.

하여금 당 사업을 의결기구인 정치위가 아니라 집행기구인 비서국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의결기구의 힘을 약화시켰다.⁴¹⁾ 또한 당 지도부 인사개편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갑산파가 권력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상무위원 6명 중 4명이, 총비서 김일성을 포함한 비서 11명 중 7명이 만주파였으며, 갑산파는 각각 2명과 4명⁴²⁾뿐이었다.

한편, 만주파와 갑산파의 대결은 특히 권력승계, 즉 후계구도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북한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던 신경완의 증언에 의하면, “1967년 5월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4기 15차 전원회의 현안인 ‘박금철·이효순 사건’은 2인자 자리를 놓고 펼쳐진 첫 권력투쟁이었으며,⁴³⁾ 김정일은 15차 전원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 중앙위 비서국 조직지도부에 근무하면서 갑산파의 죄행을 조사하고 전원회의에서 폭로하였다. 당시 후계자 문제가 대두되었던 이유는 동구권의 영향이 컸다. 갑산파는 소련의 탈스탈린주의와 중국의 권력투쟁 흐름에 편승하여 “김일성의 스탈린식 개인독재 강화”나 김영주의 부상, 김정일로의 후계구도 형성 등에 저항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갑산파는 “당 서열 4위였던 박금철을 김일성의 차세대로 옹립하기 위해, 그의 업적을 선전하는 영화 ‘일편단심’을 만들기도 하였다.”⁴⁴⁾

그러나 상술한 과정에서의 권력투쟁은 8월중파사건과 같이 직접적이지 못했다. 김일성과 만주파의 권력 장악, 특히 최현 등에 의한 무장력의 장악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갑산파는 이태올로지 조정이나 정책대결을 통해서 그 투쟁을 간접적으로 전개해야 했다.

41) 김갑식, 『김정일 정권의 권력구조』, 한국학술정보, 2005, 298쪽.

42) 갑산파에 동조하던 소련 유학파 김도만과 박용국을 포함시킨 숫자이다.

43)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김영사, 2000, 100쪽.

44) 「김부자 실체: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을 잡기까지 (1)」, 『자유아시아방송』 2006. 5. 22; 「후계자 반열에 올랐던 김평일의 추락(1)~(2)」, 『자유아시아방송』 2017. 3. 7.

2) 이데올로기 논쟁: 정통 ML주의 및 혁명전통 다원화 對 유일사상체계

이상 상술한 1960년대 만주파와 갑산파 사이의 투쟁은 이데올로기 영역에서도 진행되었다. 김일성과 만주파는 1960년대 초부터 이미 권력 강화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광범위한 ‘대중학습’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중학습 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2권(1995)과 김일성의 저작인 「김일성선집」 4권(1960), 「김일성 저작선집」 13권(1967)이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만주파는 주민들에게 항일투쟁의 중심 세력으로, 공산주의 혁명건설의 모범으로 각인되었고, “모든 사상·이론적 문제나 실무 등에서 판단의 기준은 ML주의가 아니라 김일성 저작이 되기 시작”했다.⁴⁵⁾ 또한 대중학습은 전 조선 노동당 차원에서 전개되었는데, 이는 당 내에서 김일성과 만주파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한편, 대중학습의 중점이 1960년대 중반부터 조정되었는데, “명령은 끝까지 관철”, “오직 그의 가르침대로” 등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 중점이 변하면서, “수령의 이미지가 절대화되고,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이 사회적 담론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⁴⁶⁾

이상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김일성 및 만주파의 권력 강화는 갑산파의 도전을 불러일으켰다. 갑산파 도전의 계기는 ‘정통 ML주의’ 논쟁이었다. 이는 소련의 탈스탈린주의로 시작된 중·소 분쟁 과정에서 ‘누가 더 정통 ML주의자냐’를 놓고 소련과 중국이 다툰던 상황으로, 갑산파는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정통 ML주의(소련)를 옹호하고 모택동 개인숭배 현상을 비판함으로써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였고, 만주파의 항일경력을 복한 내 유일한 항일전통으로 내세웠던 당시 대중학습 방향에 수정을 가하였다. 갑산파는 1966년경부터 만주파뿐만 아니라, 민족의 다양

45) 이종석, 앞의 책, 1995, 292-293쪽.

46) 이종석, 위의 책, 1995, 291쪽.

한 역사와 인물,⁴⁷⁾ 사례들로부터 항일전통과 공산주의 혁명에 관한 교훈을 얻으려는 방향으로 대중학습을 전개했으며,⁴⁸⁾ 이러한 맥락에서 <표 6>과 같이 만주파의 ‘항일혁명전통’에 관한 기사의 1966년 「로동신문」 게재 빈도가 대폭 줄어들었다.⁴⁹⁾

〈표 6〉 「로동신문」에 나타난 만주파 항일혁명전통 관련 기사 빈도 변화

구 분	1962.8~10	1964.4~6	1966.8	1968.8
만주파 항일혁명전통 기사 횟수	25	8	1	16
일반 역사문화전통 기사 횟수	27	3	13	0

출처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역사비평사, 1995, 295~297쪽.

그러나 결국 갑산파의 도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1967년 5월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파는 ‘반당반혁명 종파 분자’, ‘수정주의자’ 등의 구실로 숙청되었고, 김일성은 1960년대 대내외적 위기(베트남전쟁, 갑산파 도전 등)를 맞아 개인숭배를 전면화하고, ‘모택동 사상 따라 배우기’를 통해 자신만의 ‘사상’ 구축을 시도하였다.⁵⁰⁾ 1967년 3월 “도, 시, 군 및 공장 당 책임비서 협의회” 연설에서 김일성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당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처음 “유일사상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는 김정일에 의해 1974년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으로 체계화되었다. 유일사상체계란 “ML주의와 … 결별하면서 김일성이 제창한 주체사상만을 당과 사회 전반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⁵¹⁾ 결국 1980년 개정 당규약에서 ML주의가 지도이념에서 삭제되었다.

47) 독립운동가 신채호,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 등과 같은 실학자들을 포함한다.

48) 특히 실학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49) 백학순, 앞의 책, 2010, 588~589쪽; 이종석, 앞의 책, 1995, 295~297쪽.

50) 이종석, 앞의 책, 1995, 300~301쪽.

5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유일사상체계.”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144>(검색일: 2017. 4. 12).

3) 정책 대결: 천리마 운동 및 대안의 사업체계 對 수정주의 경제이론

생산성 증가보다는 투입 증가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중공업 우선 정책’은 1960년대부터 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북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1966년과 1969년 두 해 동안 공업 생산액 성장률은 -3.26%를 기록하였고,⁵²⁾ 이에 경제침체 해결방식과 관련하여, 갑산파와 만주파가 충돌하였다.

갑산파는 무엇보다 ‘천리마 운동’과 ‘대안의 사업체계’에 반대하였다. 천리마 운동이란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천리마를 탄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회주의 노력 경쟁운동”으로서, 경제정책에 대한 소련의 간섭,⁵³⁾ 1950년대 말 동구권의 대북원조 감소, 국방력 강화 방침⁵⁴⁾에 따른 투자자원 조달의 제한 속에서 노동력의 투입⁵⁵⁾을 증가시켜 ‘높은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전국적 규모의 정책이었고, 본질적으로는 ‘대중의 희생과 노력’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그 유인책은 ‘물질적 보상’보다는 노동자의 명예심, 양심과 같은 ‘도덕적 자극’, 즉 ‘정치 사상의식’이었다. 따라서 천리마 운동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빈약했고, 노동력의 투입이 증가되고 지속됨에 따라 대중의 피로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⁵⁶⁾ 결국 천리마 운동은 김정일·김정은 시대 ‘150일 전투, 70일 전투’⁵⁷⁾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발전을 정체시키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⁵⁸⁾

52) 이태섭, 앞의 책, 307~316쪽.

53) 소련은 북한에게 경공업 및 소비재 생산 중심으로 경제노선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54) 국방력 강화 방침은 1962년 제기되어 1966년 ‘경제-국방병진노선’으로 공식화되었다.

55) 작업 시간, 작업 교대율, 노동 강도 등의 증가를 의미한다.

56)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천리마 운동.”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_ary.do?pageIndex=1&dicaryId=194(검색일: 2017. 4. 18).

57) 「통일부 北 200일 전투, 6월 시작해 12월 중순까지」, 『연합뉴스』 2016. 5. 30.

58) 김연철, 앞의 책, 245~261.

한편, 대안의 사업체계란, 1961년 12월 김일성의 지시로 확산된 “집단주의 정신에 입각한 북한의 경제관리 형태”로서, “공장 지배인이 아니라, 당 소속 공장 당위원회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생산을 포함한 공장관리운영을 실시하는 경영방식”을 말하며, 그 본질은 “공장경영에 대한 당의 지배를 강화하고, 경제적 자극보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앞세우는 정치 사업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안의 사업체계 역시 태생적으로 공장 전문경영인의 자율과 창의성을 제한하고, 사업 동기를 위축시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⁵⁹⁾

이에 갑산파는 “수정주의 경제 이론”⁶⁰⁾과 “자본주의적 기업관리 방식”⁶¹⁾의 채택을 주장하면서, “정치사상의식을 강조하는 김일성의 정책이 물질의 1차성에 대한 ML주의의 유풃론에 위배되며, 경제 사업은 경제/기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고, 개별 기업/공장에 대한 당의 통제를 줄여야 하며, 공업 생산액 성장률은 6-7%만 되어도 매우 높은 것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 과거처럼 공업의 높은 성장속도를 보장할 수 없기에 그 성장률을 낮춰야 한다.”고 만주파를 비판하였다.⁶²⁾ 이는 소련의 리베르만 방식⁶³⁾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상 갑산파의 주장은 당시 북한에서 상당히 유풃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의 소련 유학 동료로서 당 국제비서 박용국과 당 선전선동부장 김도만 등이 갑산파를 지지하였고, 또한 “황해제철소 등 몇

59)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대안의 사업체계.”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_gDicary.do?pageIndex=1&dicaryId=69(검색일: 2017. 4. 25).

60) 경제 규모가 커지면 경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이론을 말한다.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61) 물질적 유인을 위주로 하며, 각 기업/공장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운영방식을 말한다.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62) 이태섭, 앞의 책, 430~431쪽.

63)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업소를 관리 운영하며 국가가 기업소에 내려 보내는 계획 지표의 범위를 대폭 줄이고, 기업소가 자체로 세운 계획에 따라 경영 활동을 조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제1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177~190쪽.

몇 공장에서는 ‘가화폐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매일 노동자들에게 노동량에 따라 가짜 돈을 지불하고, 월말에 이를 진짜 돈으로 교환해주는 제도”로서, 물질적 유인책이며, 천리마 운동과 대안의 사업 체계에 반하는 조치였다.⁶⁴⁾ 한편, 1966년 경제계획 지표를 보면 수정주의 경제이론이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도 유포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1967년 경제계획에서 공업 생산액 성장률 목표는 7%로 과거 목표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결국 정책대결은 1969년 김일성의 논문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이론 문제에 대하여」를 통해 종결되는데, 김일성은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적 방법이 아니라 오직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숙청 후 1968년에 김일성은 성장률 목표를 24%까지 끌어올렸다.⁶⁵⁾

나. 갑산파 숙청의 유형

이상 배경 분석을 토대로 본 사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7〉 '67년 갑산파 숙청의 유형

유형	체제타파 여부	투쟁의 대상
	체제 내적+외적	정치적

먼저 갑산파 숙청은 ‘체제 내적’인 성격이 강한 사건이었다. 갑산파는 이미 구축된 공산당일당독재 및 당내 김일성과 중심의 권력구조 속에서 ‘김일성 개인 및 만주파에게로의 권력 집중’, 즉, ‘김일성의 스탈린식 개인독재 체제 구축’과 ‘김영주의 정치적 부상’, ‘김정일로의 후계구도 형성’ 등에 저항하였고, ‘2인자로서 박금철의 부상’을 기도하였다. 이데올로기 논쟁 측면

64) 이태섭, 앞의 책, 429~430쪽; 433쪽.

65) 이태섭, 위의 책, 431~432쪽.

에서 갑산파는 ‘대중학습에서 항일전통과 혁명전통의 다원화를 시도’하여 항일투쟁과 공산주의 건설에 있어서 김일성과 만주파의 유일적 권위를 희석시키고자 하였다.⁶⁶⁾ 한편 정책 대결 측면에서 체제 외적인 성격이 존재했다. 갑산파는 중공업 우선 정책보다는, ‘경공업, 농업 등에서의 균형성장’을 주장했고, 천리마 운동 및 대안의 사업체계의 한계를 시정하기 위해 ‘수정주의적 경제이론 및 자본주의적 기업 관리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한편, 갑산파 속청은 ‘정치적’인 권력투쟁으로서 김일성 및 만주파에 대한 갑산파의 도전이었다.

5. '97년 황장엽 망명⁶⁷⁾

‘황장엽 망명’은 북한 정권의 핵심인물로서 주체사상의 형성에 기여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이 1990년대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맞아 1997년 2월 12일 주중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망명한 사건을 말한다.⁶⁸⁾

사실 황장엽 망명을 권력투쟁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북한 학계에서는 사건을 권력투쟁이라기보다는 황장엽 개인의 ‘일탈’로 보고

66) 앞서 언급했듯이, 독립운동가 신채호,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 등과 같은 실학자들에게서 항일투쟁의 전통을 찾으려는 변화들이 시도되었고, 1960년대 중반 김일성 이외의 인물들에 대한 전기가 발행되기도 했다. 또한 실학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로동신문』의 논조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고, 『근로자』, 『천리마』 등의 간행물에서 실학에 관한 게재물의 빈도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혁명전통에 있어서 박금철의 활동을 부각시키고자 박금철의 수절한 부인을 칭송한 『일편단심』 외에도, 『향토사』, 『내고향』, 『평퍼물』 등 갑산파의 혁명전통과 관련된 작품들이 제작되었고, 1965년에는 『로동신문』에 이례적으로 박금철의 처인 서재순의 부고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다.

67) 본 절은 김근식, 앞의 논문을 참고 및 재구성

68)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황장엽 망명사건.”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20&dicaryId=2&searchCnd=0&searchWrd=> (검색일: 2017. 5. 8).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권력투쟁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 『로동신문』 등에 게재된 변절자를 비난하는 논설이나 망명 후 황장엽의 증언을 살펴보면, 분명 당시 북한 정권 내에는 이견과 불만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이견들이 표출된 것이 ‘황장엽 망명’임을 알 수 있다.⁶⁹⁾ 따라서 증거자료들이 망명 후 증언에 한정되어 있고, 권력투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황장엽이 어떤 이견과 불만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 정권에 내재되어 온 갈등 구조와 논리를 간단없이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가. 황장엽 망명의 배경

1) 권력구조 변경: 수령제와 후계자론에 대한 이견 가능성

황장엽은 무엇보다 수령제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1995년 10월 8일자 및 10월 20일자 「로동신문」을 살펴보면, 동구권 붕괴와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북한 정권 내에는 수령을 비판하고, 사상의 자유나 민주주의 등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⁰⁾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노동계급의 수령이 서거한 이후 개인미신이라는 간판 아래 그의 권위를 혈뜯는 안팎의 원수들의 공격과 배신으로 시작된다. ... 수령의 권위를 혈뜯고 당과 수령을 인민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 반사회주의 책동의 첫째 전략이다.”⁷¹⁾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사람들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은 췌버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사람들의 창발성을 발양시킨다는 미명하에 사상의

69) 김근식, 앞의 논문, 64~73쪽.

70) 김근식, 위의 논문, 71~74쪽; 81쪽.

71) 『로동신문』, 1995. 10. 8. (김근식,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자유화를 부르짖으며 사회주의 사회에 부르주아 반동사상을 퍼뜨리고 자본주의를 복귀시키기 위한 반혁명적 책동을 악랄하게 벌리었다.”⁷²⁾

상술한 상황과 관련하여 황장엽은 망명 후 발간한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수령제가 ML주의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⁷³⁾

“대중이 있고서야 당이 있고, 당이 있고서야 수령이 있으며, 당과 수령은 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존재라는 ML주의적 관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수령이 있고서야 당이 있을 수 있고, 당이 있고서야 대중이 있을 수 있으며, 당과 대중이 전적으로 수령을 위해 복무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다.”⁷⁴⁾

“ML주의의 어느 고전에도 당이 ‘수령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지적한 명제는 없으며, 정권을 자기 아들에게 세습적으로 넘겨주어도 좋다는 명제는 없다. 또 정식 선거절차도 거치지 않고 내가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총비서로 추대하라고 강요하여도 좋다는 명제는 찾아볼 수 없다.”⁷⁵⁾

또한 황장엽은 다음과 같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옹호하기도 하였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자본가 계급에게만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에게는 독재만 가져오게 한다는 주장은 계급적 편견으로 사실을 왜곡한 궤변이다. … 다당제 민주주의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이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체험하는 정치적 면에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정치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⁷⁶⁾

결국 황장엽은 1996년 5월 9일 김정일로부터 “모스크바 국제토론회

72) 『로동신문』, 1995. 10. 20. (김근식,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73) 김근식, 앞의 논문.

74)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통일정책연구소, 1998, 121쪽.

75) 황장엽, 앞의 책, 1998, 27~28쪽.

76) 「황장엽의 비밀파일」, 『월간조선』, 1997. 4. (김근식,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가 당의 의도에 맞지 않게 진행되었다”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느끼며,⁷⁷⁾ 망명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2) 이데올로기 논쟁: 주체사상의 독창성에 대한 이견

이상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에 더불어 황장엽은 이데올로기 영역에서도 이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공간자료와 황장엽의 증언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황장엽은 어떤 내용에 있어 이견을 갖고 있었을까? 바로 ‘주체사상과 ML주의의 관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김일성과 김정일은 1970년대 권력투쟁을 통해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체계에서 주체사상은 ML주의를 넘어선, “스스로의 고유의 원리에 의해 전개되고 체계화된 인간 중심의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체계였다. 따라서 ML주의는 1980년 조선노동당 당규약 개정 시 지도이념에서 삭제되었고, 주체사상만이 명시되었다. 황장엽은 이러한 주체사상의 ‘독창성’에 대해 이견을 갖고, “주체사상을 ML주의 내에서 해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0년 10월 김정일이 당 중앙위에서 한 담화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⁷⁸⁾

“최근 일부 사회과학자들이 주체사상을 해설하여 쓴 글들을 보면 주체철학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바로 해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난 시기 일부 사회과학자들 속에서 주체사상을 맑스주의의 유물변증법의 틀에 맞춰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해준 일이 있는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⁷⁹⁾

77) 황장엽,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시대정신, 2006.

78) 김근식, 앞의 논문, 76~77쪽.

79) 김정일,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296. (김근식,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황장엽은 아래 「신동아」와의 대답에서 위 글에서 언급된 일부 사회과학자들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1996년 7월 내 이론을 비판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 일부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썼더군요. 그러더니 김정일의 측근자가 찾아와서 이번에는 자기비판해야 되겠습니다. … 그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비판해서 올렸죠.”⁸⁰⁾

결국 황장엽은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망명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정책 대결 : 기존 북한 경제노선에 대한 이견과 중국식 개혁개방 기대

끝으로 황장엽은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이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북한은 ‘내부모순과 외부제약’⁸¹⁾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황장엽은 아래 『월간조선』과의 대답, 『회고록』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기존 경제노선의 수정과 중국식 경제정책의 채택을 희망했던 것 같다.⁸²⁾

“오늘 개혁개방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국은 전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며, 국제 반동들의 질투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 개혁개방의 성공은 인류 공동의 대경사이며, 역사 발전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개혁 개방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따라 배워야 한다.”⁸³⁾

“마땅히 자본가 계급과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사회 발전에서 역사적으로 기여한 거대한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적 발전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여 봉건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나라 사람들이 사회주의 구호

80) 「김정일 체제의 통치이념과 권력실세들」, 『신동아』, 1998. 7.

81)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한계,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른 자원 배분의 왜곡과 불균형, 과다한 국방비 지출, 동구권의 붕괴로 인한 무역 및 원조 관계의 단절·축소 등을 말한다.

82) 김근식, 앞의 논문, 78.

83) 「황장엽의 비밀파일」, 『월간조선』, 1997. 4. (김근식,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밑에 자본주의를 무조건 비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가소로운 일이다.”⁸⁴⁾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 북한도 하루빨리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충동을 받았다. … 틈틈이 국제부 요원들과 주체사상연구소 연구원들에게 변화하는 중국의 실상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정신을 일깨워주려고 했다. … 나는 … 그(김정일)의 사상을 조금이라도 계몽시켜볼까 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현대자본주의의 계급구조 변화와 …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낡았다는 것을 이해시키려 했다.”⁸⁵⁾

그러나 북한은 경제노선을 수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책의 수정은 그동안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특히 수령제와 권력세습으로 인해 체제의 경직성이 높은 북한이기에, 이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아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1991년 5월 담화와 1995년 6월 21일자 「로동신문」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암시하였고,⁸⁶⁾ 결국 황장엽은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한해 100만 명가량이 굶어죽는 것을 보면서,” 망명을 택하게 되었다.⁸⁷⁾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부르짖는 사적 소유제도의 우월성이란 더 많은 재부를 긁어모으기 위한 무제한한 약육강식의 경쟁으로서 … 불피코 착취와 압박을 낳고 근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킨다.”⁸⁸⁾

“기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상사업을 집어던지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방법을 끌어들이어 사람들 속에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조장시키고 황금만능의 부르쥬아 선전에 동조하고 소유의 다양화를

84) 「황장엽의 비밀파일」, 앞의 글.

85) 황장엽, 앞의 책, 2006, 261~267쪽.

86) 김근식, 앞의 논문, 79쪽.

87) 황장엽, 앞의 책, 342쪽;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이종전략과 실리사회주의』, 선인, 2004, 60쪽.

88)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근식,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제창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통째로 파괴하여 버렸다.”⁸⁹⁾

나. 황장엽 망명의 유형

이상 배경 분석을 토대로 본 사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8〉 '97년 황장엽 망명의 유형

유형	체제타파 여부	투쟁의 대상
	체제 내적+외적	개인적 일탈

먼저 '97년 황장엽 망명의 배경은 여전히 '체제 내적'인 성격이었다. 물론 당시 북한 내에서 사상의 자유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기류가 형성되었고, 또한 망명 후 황장엽이 서구식 민주주의의 장점을 옹호하기도 하였지만, 본질적으로 망명 전 수령제에 대한 황장엽의 이견은 ML주의 틀 내에서 수령제의 과도한 개인권력집중을 비판하는 것이었고, ML주의 본연의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민주집중제, 집단지도체제 등으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것이었다. 수령제에 대한 이러한 태도 변화가 발생한 배경은 무엇보다 1990년대 북한이 봉착한 대내외적 위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도 망명 전 황장엽은 서구식 민주주의나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정통ML주의의 담론 내에서 주체사상의 독창성에 이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반면,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체제 외적'인 성격이 있었다. 황장엽은 기존 경제정책의 고수보다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과 중국식 개혁개방의 도입을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쟁의 대상 측면에서 본 사건은 정치적 권력투쟁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일탈행동으로서 황장엽이 이견을 내비친

89)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로동신문』 1995. 6. 21. (김근식,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것이였다. 이는 당시 김정일의 권력과 수령제가 그만큼 공고했음을 의미한다.

6. '13년 장성택 처형

'13년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이 2013년 12월 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로 모든 직무에서 해임되고 출당·제명되어,⁹⁰⁾ 4일 후인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성 특별군사재판에서 '국가전복 음모행위' 혐의로 처형된 사건을 말한다. 장성택 숙청은 갑산과 숙청 후 이례적으로 '종파행위'에 관한 북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장성택 숙청을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살펴보는 것은 북한 정권에 내재되어 온 갈등 구조와 논리의 지속과 변화를 간단없이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가. 장성택 처형의 배경

1) 권력구조 변경: 장성택의 분파형성과 자신에 대한 우상화조장

권력구조 측면에서 장성택 숙청과 처형의 배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권력엘리트 간의 투쟁이며, 다른 하나는 장성택과 김정은 간의 갈등이다. 먼저 권력엘리트 간의 투쟁이란 소위 충성경쟁을 말한다. 권력승계기에는 권력구조의 변경이 발생하는데, 누가 후계자를 후견할 것인지, 누가 수령과 연합하여 새로운 통치세력으로 부상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새로운 통치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면, 권력위계에 따라

9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13. 12. 9.

그에 상응하는 이권⁹¹⁾을 확보하게 되며, 따라서 권력구조 변경을 둘러싸고 개인 및 기관 간의 갈등과 수령에 대한 충성경쟁⁹²⁾이 발생하는 것이다. 장성택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행정부를 필두로 조직지도부 및 군부와 갈등하였고, 결국 경쟁에서 패배하여 2013년 숙청되었다는 것이 ‘충성경쟁’ 관점에서 숙청의 배경이다.⁹³⁾

그런데, 장성택은 왜 하필 혁명화나 해임 등이 아니라 처형되었을까? 분명 장성택이 충성경쟁을 넘어서 김정은의 정치권력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장성택 숙청과 처형의 두 번째 배경이다. 바로 장성택의 권위 신장이 김정은의 권력승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쳤다는 맥락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성택은 갑산과 숙청 이후 이례적으로 ‘종파행위’에 관한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승계 과정에서 차기 지도자는 후계자로 선정되고 취임하여 표면적으로 권력을 이양 받더라도, 이후 이양된 권력을 스스로 공고화하고 영속시켜야 하는,⁹⁴⁾ 즉 “권력과 지배의 정당성을 재구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⁹⁵⁾ 소련·중국의 권력투쟁을 거울삼아 승계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⁹⁶⁾ ‘후계자론’에 따르면, 김정은은 후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 특히 업적과 공헌을 통해 영도력을 인정받아 ‘절대적 권위와 위신’을 확보해야 했으며, “당 내에서 후계자의 의도와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기풍, 전당이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 아래 하나 같이 움직이는 규율과 질서”, 즉, 영도체계를 세우

91) 무역권, 사업권, 배급권, 인사권 등의 각종 권한을 포괄한다.

92) 권력승계 과정에 있어 공헌을 세우거나 재정적 지원(상납)을 증가시키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93) 박형중, 앞의 논문, 2014b, 2~23쪽.

94) 오경섭,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비교: 제도와 리더십의 동학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12, 10쪽.

95) 안경모,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 정치적 계승의 위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24쪽.

96) 박명규,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엘리트·정책·안정성』,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1.

야 했다.⁹⁷⁾

그러나 김정은에게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나이도 어릴뿐더러, 당사업 경험도 부족했다. 승계과정 역시 4년(2009-2012)으로 짧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의 권위를 비하하는 반체제 선전물이 유포되고 저항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⁹⁸⁾ 이러한 상황에서 ‘장성택 섭정론’이 회자되었고, 2013년 11월 6일경 열린 장성택 측근 모임에서는 ‘장성택 만수무강’, ‘장성택 만세’ 등의 구호가 나왔다고 한다.⁹⁹⁾ 장성택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권위신장과 ‘섭정자’ 이미지로 김정은의 권위와 영도체계 재구축을 위협했던 것이다.

‘정치국 결정서’와 ‘특별군사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장성택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분파책동으로 자기세력을 확장하고 감히 당에 도전”했으며, “현지도도를 자주 수행하게 된 것을 악용하여 … 혁명의 수뇌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어 제놈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였고, “제놈에게 아부아첨하고 추종하다 … 철직해임된 자들을 …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산하기관들에 끌어들”었으며, “적들에게 매수되어 변절한 자들”을 “적발숙청된 이후에도 … 계속 끌고다니면서 당과 국가의 중요직책에 박아넣었”고, “1980년대부터 아첨군인 리롱하놈을 … 당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는 종파적 행동을 하여 쫓겨났던 그자를 … 당중앙위 제1부부장자리에까지 올려놓았”으며, “불평불만을 가진자들을 … 자기 주위에 규합하고는 그우에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였고, “높은 부서와 산하단위의 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이며 … 제놈이 있던 부서를

97) 백학순, 앞의 책, 2015, 82-83쪽.

98) ‘경력 없는 김정은’, ‘무능한 철부지’, ‘새끼돼지’ 등의 비하 표현이 발견됐고, 김정은 생가의 대문이 파손되거나, 김정일과 김정숙의 사진을 불태우고 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화면이 입수되었다. 「김정일 등장 이후 北내부 반체제 움직임 늘었다?」, 『DailyNK』 2011. 6. 29.

99) 정창현, 앞의 책, 2014, 47~48쪽.

그 누구도 다치지 못하는 《소왕국》으로 만들어놓았다.”¹⁰⁰⁾

실제로 장성택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제3차 조선노동당 당대표자회의에서 장성택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룡희, 문경덕, 리영수, 지재룡 등이 중앙정치에 진입하였고,”¹⁰¹⁾ 당 행정부¹⁰²⁾를 통해서 “내각, 도인민위원회 등 북한의 제 행정기관과 국가안전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등 사법·검열기관, 외교관 등 해외 근무자 및 해외출장자 등을 지도하고 있었다.”¹⁰³⁾

따라서 김정은은 장성택의 세력신장을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수령의 절대성이 제도화되고 우상화된 고도로 경직된 체제에서, 권력승계기에, 장성택과 그 분파가 성장하는 것은 수령제라는 권력구조의 승계와 안착에 치명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극단적 해석으로는 수령제의 붕괴와 집단지도체제 또는 당내 파벌정치로의 회귀를 초래할 수도 있었으며, 당시 북한의 복잡한 정치상황은 “파편화된 자율적 소왕국 집합국가”로 묘사되기도 하였다.¹⁰⁴⁾

결국 김정은은 장성택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숙청의 결과로 당 중앙위 행정부가 해체되고, 행정부가 맡아왔던 사업들이 조직지도부로 이관되었으며, 황병서 등 새로운 엘리트들이 등용되었다. 한편 장성택 처형 전 이미 장성택 측근인 리룡하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월권’과 ‘분파행위’ 등의 죄목으로 2013년 11월 공개 처형되었다.¹⁰⁵⁾ 이상의 과정은 분명 ‘권력투쟁’의 한 형태였다. 비록 김정은과 장성택 간에 힘이 대등한 것은 아니었지만, 장성택의 분파형성과 권위

10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앞의 기사; 「특별군사재판 장성택 판결문」, 『조선중앙통신』 2013. 12. 13.(정창현, 앞의 책, 2014, 재인용.)

101)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정치적 과제」, 『통일정책연구』 21권 1호, 통일연구원, 2012, 10쪽.

102) 조직지도부의 일부였던 행정부는 2007년 장성택의 행정부장 임명과 함께 독립 부서가 되었다.

103) 정성장, 앞의 논문, 12쪽.

104) 박형중, 앞의 논문, 2014a, 23쪽.

105) 정성장, 앞의 논문, 8쪽.

신장은 권력승계기 김정은에게 있어서 분명 실제적 또는 상징적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2) 이데올로기 논쟁: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유일영도 10대 원칙 훼손

사실 장성택 숙청 과정을 살펴보면, 장성택과 김정은 간에 직접적인 이데올로기 논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장성택은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하는데 태만하였고, 때때로 ‘불경한’ 태도를 보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경직된 체제에서는 이러한 작은 일탈적 행태조차도 김정은 중심의 정치사상적 단결과 김정은 권력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인 ‘당의 유일영도 10원칙’ 구축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주지의 사실이듯 김정은은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사업을 전개했다. 무엇보다도 2012년 4월 11일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선대의 사상을 계승한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¹⁰⁶⁾을 제시했고,¹⁰⁷⁾ 2013년 6월 19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구체화한 규범적 지침으로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이하 당의 유일영도 10대 원칙)을 공표했는데, 이 원칙은 1974년 ‘당의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개정한 것이었다.¹⁰⁸⁾

이 원칙의 핵심내용은 제1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제3조, “김일성-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 제4조 “당의 방침과 지시를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와 엄격히 구별”, 제5조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과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를 무조건성의 원칙으로 준수”, 제6조

106) 김일성-김정일주의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자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사상”이며,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여,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포괄하고, 그 사상리론들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혁명사상이다.” 통일교육원, 『2017 북한이해』 참조

107) 백학순, 앞의 책, 2015, 19쪽; 「조선로동당규약 서문」, 『로동신문』 2014. 2. 26.

108) 백학순, 위의 책, 2015, 128쪽.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 “개별적 간부들의 직권에 놀리워 맹종맹동하거나 비원칙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철저히 제거”,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현상에 반대하고 투쟁”, 제9조의 “정책적 문제들을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 제10조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 “혁명전선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당중앙’¹⁰⁹⁾을 명시함으로써 김정은의 권위를 명문·제도화하고, ‘당의 권위’를 명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한 김정은의 권위를 당의 권위로 보완하는 한편, ‘개별 간부들의 일탈’을 경고함으로써 ‘김정은(당중앙)’뿐만 아니라 ‘당의 지시·지침에 대한 개별 간부들의 이견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결국 기존 권력구조를 답습한 김정은 중심의 영도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었다.’¹¹⁰⁾

그러나 ‘장성택은 이러한 ‘당의 유일영도 10대 원칙’을 일탈적 행태 등으로 훼손하였다. ‘결정서’에 따르면, 장성택 일당은 “동상이몽, 양봉음위”하였고, “당의 로선과 직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집행을 의식적으로 태업하고 왜곡 집행하였으며, 당의 방침을 공공연히 뒤집어었던 나머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 행위”를 하였는데,¹¹¹⁾ 일례로 2013년 1월 31일 한국 국방부 정보본부는 “올해 들어 장성택이 김정은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 자주 식별돼 북한 내 실질 권력자가 김정은이 아닌 장성택이라는 소문이 지속적으로 들린다.”라는 보도 자료를 내놓았고,¹¹²⁾ 2013년 1월 제4차 당세포 대회와 2013년 4월 당세포 대회에서의 장성택의 ‘비딱한’ 자세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으며,¹¹³⁾ ‘판결문’은 ‘건성박수’와 같은 장성택의 ‘불경한 행동’을 죄목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결국 장성택은 숙청되었고, 2014년 2월 제8

109) ‘당중앙’은 김정은을 의미한다.

110) 백학순, 앞의 책, 2015, 128~133쪽.

1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앞의 기사.

112) 정창현, 앞의 책, 2014, 67쪽.

113) 「장성택 처형 1년 ... 지금 북 간부들은?」, 『TV조선』, 2014. 12. 13.

차 사상일군대회에서 김정은은 “유일적 령도체계를 허물어보려는 그 어떤 사상적 변질체도 배겨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숙청을 ‘사상적’으로 정당화하였다.¹¹⁴⁾

3) 정책 대결: 이권사업의 자의적 운영, 경제정책에 이견 제시 가능성

‘결정서’와 ‘판결문’은 장성택 숙청과 처형의 사유로 ‘정책 갈등’의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각책임제 저해와 각종 이권사업들의 임의적 운영’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정책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장성택의 내각책임제 저해와 각종 이권사업들의 임의적 운영을 살펴보자. 내각책임제¹¹⁵⁾란 경제관리 개선 조치로서 기존 당 중심의 ‘대안의 사업체계’와는 다르게 경제는 경제담당기관 본인들(내각)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권력승계 측면에서 내각책임제 시행의 근본적 목적은 경제·행정 영역에서 ’90년대 이후 사실상 와해되었던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었다.¹¹⁶⁾ ’90년대 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제·행정영역의 분권화·독자화는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는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영도체계 구축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114)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자」, 『로동신문』 2014. 3. 4; 백학순, 앞의 책, 2015, 99쪽; 128~130쪽.

115) 김정은은 2012년 4월 6일 당중앙위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서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내각책임제’를 강조하였고, “내각책임제 강화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과 투쟁”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창현, 「김정은 체제의 북한 개혁·개방 방향과 전망」, 『통일경제』, 제2호, 현대경제연구원, 2012, 32~33쪽.

116)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으로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국가 통제 시스템과 계획 경제 시스템이 사실상 와해되면서 각급 단위에서 자력갱생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 각 부문, 지역, 단위는 각기 자신의 개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 본위주의’에 바탕하여 사실상 분권화, 자유화, 독자화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태섭, 앞의 책, 2001, 354쪽.

있었다. 따라서 김정은은 내각책임제를 시행하여 당·군의 독자적인 경제 사업 운영관행을 근절하고, 국가재정을 내각에 집중시키고자 하였는데,¹¹⁷⁾ 이는 내각을 중심으로, 궁극적으로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정권의 재정체계를 재건하겠다는 것이었다.

‘결정서’에 따르면 장성택과 그 세력은 “당이 제시한 … 내각책임제 원칙을 위반하면서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교묘한 방법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주요한 몫을 담당할 부문과 단위들을 걷어쥐고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 관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국가재정관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매국행위를 함으로써 … 수령님과 …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 수 없게”하였는데,¹¹⁸⁾ 실제로 장성택은 비대해진 행정부 권력을 통해 내각책임제 구축을 저해하고, 김정은과 내각의 경제이권을 침해한 듯하다. 일례로 당시 충청치국 산하 석탄·수산물 수출 관장 외화벌이 업체인 ‘54부’가 행정부 예하로 편입되었는데,¹¹⁹⁾ 판결문에 따르면 장성택은 이 54부를 통해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도록 하여 심복들이 거간군에게 속아 많은 빚을 지게 만들고 지난 4월 그 빚을 갚는다고 하면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 먹는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고,”¹²⁰⁾ 또한 “54국 산하로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북한 해당화식당에서 발생한 이익을 별도로 관리하다 적발”되었다고도 한다.¹²¹⁾

다음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이견 제시 가능성’을 살펴보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장성택은 “기업/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해 생산성과를 늘리는

117) 정창현, 앞의 논문, 2012, 32-33쪽.

11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4차 전원회의에 대한 보도』, 앞의 기사; 정창현, 앞의 책, 2014, 38-42쪽.

119) 박형중, 앞의 논문, 2014b, 14쪽.

120) 『조선중앙통신』, 앞의 보도.

121) 정창현, 앞의 책, 2014, 68-69쪽.

독립채산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는데,”¹²²⁾ 이러한 ‘독립채산제’ 등 경제정책에 대한 이견 제시 가능성은 장성택의 ‘정치적 부침’ 과정과 200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 변경’ 과정을 대조해 보면 사실인 듯하다. 왜냐하면, ‘경제정책 변경 시점’이 ‘장성택의 정치적 부침 패턴’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제정책이 변경될 때, 장성택이 정치무대에서 사라졌고, 그의 복귀를 전후로 정책이 이전의 것으로 회귀하였다. 일례로 ‘6·28조치’ 변경과정을 살펴보자.

북한은 2002년 7·1조치라는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가격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정책 변화들”¹²³⁾로서 개혁적 정책이었다. 이후 북한은 2003년 “공산품 거래를 허용하는 ‘종합시장’을 도입했고, 이어서 국영기업들의 경영자우편을 일부 보장하는 정책을 단행”했는데,¹²⁴⁾ 이러한 정책들이 진행되던 중 2003년 7월 장성택이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다. 결정서와 보도를 토대로 상황을 판단해보면, 장성택이 사라진 것은 이미 이 시기부터 그가 정책변화에 이견을 제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경제정책은 2005년에 재조정되었다. 이해 “10월부터 북한당국이 식량에 관한 과거의 배급제를 전면 부활하고, 시장에서의 곡물거래를 불허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나왔고,”¹²⁵⁾ 또한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장화 확대 경계와 장마당 단속이 본격화되었다.”¹²⁶⁾ 7·1조치를

122) 「장성택, 김정은 겨냥 ‘그러면 안되는데 ... 역린 자극?」, 『JTBC뉴스』, 2013. 12. 5.

123) “가격 현실화(국정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상향, 석탄/전력이 아닌 쌀값 기준으로 생필품 가격 재책정), 인플레이션 통제를 통한 인위적인 저가격정책의 포기, 노동자 임금 인상, 인센티브제 강화, 각종 복지 혜택 폐기(교통/주택사용료 등 인상), 환율 현실화, 기업 경영의 독립성과 노동 성과급제 실시” 등을 말한다. 장달중 편, 앞의 책, 165쪽.

124) 권영경,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전략과 전망」, 현대북한연구회 엮,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한울아카데미, 2009, 207~208쪽.

125) 이석, 「북한의 경제: 변화와 지속」, 체제통합연구회 편, 『북한의 체제와 정책』, 명인문화사, 2015, 116쪽.

126) 양문수, 『북한 경제의 시장화』, 한울아카데미, 2010, 78쪽.

억제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조정되기 시작한 것인데, 이는 장성택이 정치에 복귀한 시점에 근접했다. 장성택은 2006년 1월 28일 정치무대에 복귀했고, 2007년 10월경에는 당 행정부장으로 승진했다. 이는 곧 경제기관들이 장성택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당시 진행 중이던 ‘7·1조치를 억제하는 정책들’ 역시 장성택의 지도를 받았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보수화와 과거 회귀 흐름”은 2009년에도 지속되었다. 2009년 11월 말 “화폐개혁: 화폐 액면 절하(re-denomination) 및 신·구 화폐 교환”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교환 한도를 초과하는 주민 보유 화폐를 회수하여, 상인과 부유층의 부를 축소시켰고,”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활동의 위축과 계획경제의 복원”을 낳았다.¹²⁷⁾ 이러한 정책 결정에도 역시 장성택이 영향을 미친듯한데, 판결문에 따르면, “2009년 만고역적 박남기놈을 부추겨 수천억원의 ... 돈을 람발하면서 ...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게 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도록 배후조종한 장본인은 바로 장성택”이었기 때문이며, 박남기는 화폐개혁이 야기한 경제적 혼란¹²⁸⁾으로 인해 2013년 3월 처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경제정책 변경은 2012년 김정은이 추진한 ‘6·28조치(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였다. ‘6·28조치’는 ‘7·1조치’와 유사한 개혁적 정책으로서 그 핵심은 “경영권을 현장에 부여”하는 것이었으며,¹²⁹⁾ 구체적으로 “국가(내각)의 계획적, 통일적 지도 밑에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단위가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는 것”으로 ‘독립채산제’와 ‘분조관리제’ 등을 그 내용으로 했다.¹³⁰⁾ 상술했듯이 장성택은 독립채산제가

127) 양문수, 앞의 책, 103~109쪽.

128) 물가와 환율 폭등,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 물자 부족 등이다. 양문수, 앞의 책.

129) 「평양326전선공장에서 보는 경제관리의 새 시도」, 『조선신보』 2013. 5. 1.

130) 정창현, 「계획 원칙 고수하며 실리 추구 경제관리 개선, 경제특구 확대」, 『통일뉴스』, 2012. 8. 20.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상술한 ‘경제정책의 보수-개혁적 변경 과정’과 ‘장성택의 정치적 부침: 복권과 실종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장성택이 2002년부터 추진된 경제관리 개선 조치, 즉 개혁적 정책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장성택 처형 후 김정은 정권에서 사적경제활동과 시장경제요소가 비공식시장경제·가계경제의 영역에서 공식·비공식 국영경제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위 경제정책의 변경 과정을 둘러싼 김정은과 장성택 간의 갈등은 사실인 듯하고, 장성택 처형으로 인해 개혁적인 방향으로 그 가닥이 잡힌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¹³¹⁾

위의 추론이 타당하다면, 장성택은 단순한 ‘개혁개방론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즉, 장성택의 행태는 ‘개혁’ 또는 ‘보수’의 이분법적 양자택일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장성택은 김정일 사후 권력승계 시기에 자신의 권력기반(당 행정부 중심 세력규합과 이권사업 운영 등)에 유리한 방향으로, 즉, ‘내각책임제 저해와 당 행정부 중심의 경제운용’, ‘중국에 우호적인 나선경제특구 운용’,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에 대한 반대’와 ‘시장화 억제 경제정책’, ‘계획경제의 복원’ 등의 특정 경제정책을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나. 장성택 처형의 유형

이상 배경 분석을 토대로 본 사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9〉 '13년 장성택 처형 유형

유형	체제타파 여부	투쟁의 대상
	체제 내적+외적	관료적+정치적

131) 조한범·임강택·양문수·이석기,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통일연구원, 2016.

먼저 장성택 처형은 여전히 ‘체재 내적’인 성격이 강했다. 장성택의 비대해진 명성과 권위, 행정부 중심의 세력규합이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위협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결국 공산주의라는 정치체제 내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사실 장성택의 권력은 김정은의 제도화된 권력에 훨씬 못 미쳤다. 한편 행정부의 장성택과 조직지도부·군부 간의 충성 경쟁은 더욱이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 틀 내에서 발생한 갈등이었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도 장성택은 새로운 대안이데올로기를 옹호하거나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일탈적 행동을 통해 김정은의 ‘당의 유일영도 10원칙’ 구축을 저해했다. 다만 정책 갈등에서는 과거 사례에서와 같이 체제 외적인 성격이 있었다. 6·28조치 등과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가 반영된 개혁적 정책의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투쟁의 대상 측면에서 장성택 숙청은 분명 개인 및 기관 간의 충성경쟁이라는 ‘관료적’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장성택이 혁명화 교육, 해임 등이 아니라 처형된 점, '67년 갑산파 숙청 이후 이례적으로 ‘반당·반혁명적 종파행동’들이 공식적으로 ‘결정서’와 ‘판결문’을 통해 상세히 제시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장성택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분명 김정은 권위구축을 저해한 ‘정치적’ 투쟁의 성격도 갖고 있었다.

7. 북한 권력투쟁 배경의 지속과 변화

지금까지 북한의 주요 숙청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북한 정권 내에는 수령제나 전체주의 등이 묘사하고 있는 현실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갈등과 다툼, 조정과 타협, 즉 정치와 권력투쟁이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 10>과 같이 권력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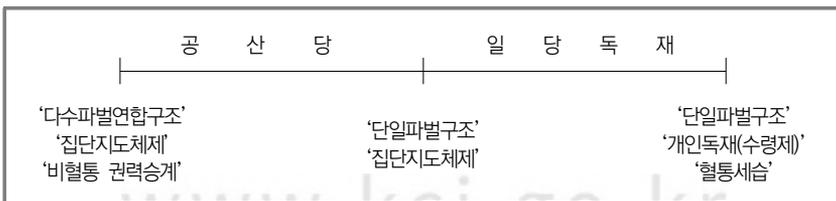
의 배경을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정리해보면, 권력투쟁의 배경이 상당히 일관성 있는 ‘갈등구조와 논리’의 연속선상에서 변동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0〉 속청 사건을 통해 살펴본 북한 권력투쟁의 배경

배 경	'56년 8월 종파사건	'67년 갑산파 숙청	'97년 황장엽 망명	'13년 장성택 숙청
권력구조	조선노동당 내 파벌연합구조 對 김일성파 단일구조	김일성 개인독재/ 만주파 중심 구조 對 집단지도체제/ 갑산파와의 연합 후계구도 문제	수령제/권력세습 對 ML주의 본연의 집단지도체제 인민민주주의	김정은 권위구축 對 장성택 분파형성/ 우상화조장
이데올로기	주체확립/ 스탈린주의 對 교조·형식주의/ 탈스탈린주의	유일사상체계 對 정통ML주의/ 혁명전통 다원화	주체사상 독창성 對 ML주의 계승성	당의 유일영도 10원칙 훼손
정 책	중공업 우선 정책 對 균형정책	천리마운동/ 대안의 사업체계 對 수정주의 경제이론/ 자본주의적 기업관리 방식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 對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도입/ 중국식 개혁개방	내각책임제/ 6.28조치 對 당 행정부 중심 이권사업 운영/ 보수적 경제정책

먼저 권력구조 면에서 북한 정권 내 권력투쟁 배경을 정리해보면, 그 배경은 다음 〈표 11〉과 같은 갈등구조와 논리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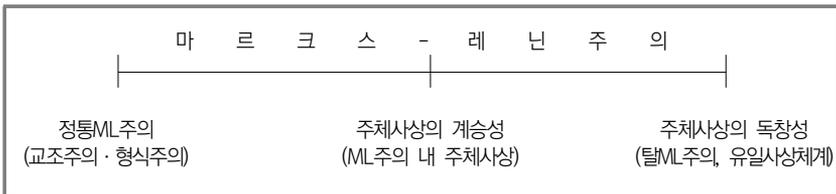
〈표 11〉 권력구조를 둘러싼 갈등구조와 논리



즉,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라는 큰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공산당 내 ‘다수파별연합구조-집단지도체제-비혈통 권력승계’로부터 ‘단일파별구조-개인독재(수령제)-혈통세습’으로의 연속선상에서 권력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전개됐으며, 그 논리는 ‘권력이 개인 또는 특정 파벌에 집중되는가, 분산되는가?’, 의사결정권이 ‘절대적 개인(수령)에 의해 행사되는가, 집단적 의사(의결기구)에 의해 행사되는가?’ 등의 문제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권력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체제내적’인 성격을 띠어 왔음을 보여주며, 권력투쟁과 이에 따른 숙청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서구식 민주주의체제를 둘러싼 갈등이나 체제전환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고, 권력투쟁으로 인해 수령제 붕괴 시 오히려 ‘공산당 일당독재 하 단일파별 집단지도체제’나 ‘다수파별연합 집단지도체제’ 등 공산주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권력투쟁 배경을 정리해보면, 그 배경은 다음 <표 12>와 같은 갈등구조와 논리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구조와 논리



즉, 북한 체제 형성과 발전에 미친 지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ML주의는 국가와 사회의 근저로서 유지되었고, 단지 ‘공식적·정치적 통치이념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소련을 무조건적으로 답습하는 ‘교조주의·형식주의’로부터 ‘ML주의라는 틀 내에서 해석되는 주체사상’, 그리고 ‘ML주의로부터 결별한 독창적 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 유일사

경제요소와 사적경제활동이 6·28조치 등을 통해 공식화·제도화되어 국가경제영역으로 통합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¹³³⁾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경제영역에서의 일련의 변화가 북한을 동유럽식 ‘탈사회주의적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는 지켜봐야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권력구조와 이데올로기 등의 영역에 있어 북한 정권의 통제력은 여전히 높으며, 상술했듯이 과거부터 이 영역들에서의 갈등은 ‘체제내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정치와 경제 두 영역에서 모두 체제이행이 발생한 동유럽과는 다르게, 중국처럼 ‘권력구조’와 ‘이데올로기’ 등 정치영역에서는 공산주의적 체제가 공고히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영역에서만 탈사회주의적 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8. 결론: 연구의 정책적 함의

이상 숙청 사례들을 통해 북한 정권 내 권력투쟁의 지속과 변화를 살펴해보았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북한에 권력투쟁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곤 하지만 분명 북한 정권 내에는 개인이나 세력 간의 이견과 갈등, 조정과 타협이라는 권력투쟁과 정치가 존재해 왔다. 둘째, 이러한 내재된 갈등과 권력투쟁은 권력이양기나 대내외적 위기시에 여지없이 숙청으로 표면화되어 갈등이 봉합되고, 그 결과로서 지배자의 정치권력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다. 즉, 수령의 절대 권력도 영원한 것은 아니며, 김씨 일가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해 정치적 생존을 추구하고, 수령제라는 자신의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는 김정은의 갑작스런 신상 변동이나 노령화로 인한 권력교체기에 또 다시 권력투쟁과 숙청이 발생할 수 있

133) 조한범 외, 앞의 책, 25쪽.

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은 바로 이러한 시기인 것임을 시사한다.

물론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 급변사태 등 정치변동은 쉽지 않을 것이다. 권력투쟁의 양상을 살펴보면, 결국 모든 사례는 반대세력의 숙청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반대세력이 무장력(쿠데타, 게릴라)이나 사회세력(혁명, 사회운동)을 동원해 직접적으로 도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영역과 이슈에서 대북 정책 기제를 개발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영역과 이슈는 앞서 언급한 권력투쟁의 배경, 그 갈등구조와 논리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권력구조’, ‘이데올로기’, ‘경제정책’ 영역에서 발견된 ‘갈등구조와 논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기제를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력구조 측면에서 ‘수령제’나 ‘단일파벌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기제, ‘집단지도체제’ 또는 ‘파벌정치’로의 회귀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수 있다. 김정은이나 만주계 김일성과 이외의 누군가에게 힘이 실리도록 제반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신격화 절대화된 수령의 권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 북한 권력엘리트와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의 정치경제적 우월성을 약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 등을 마련할 수 있다.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대북방송·전단이나 한류문화콘텐츠 유포 등이 이러한 정책기제의 사례이다.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북한의 개혁적 경제정책과 시장경제 및 사적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를 개발할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나 중국을 경유한 북한과의 경제사업 확대 또는 축소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다. 바로 권력구조나 경제정책에서의 개혁적 변화가 반드시 북한 정권의 ‘붕괴’나 ‘교체’, ‘급변사태’, ‘서구식 체제로의 이행’ 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령제나 유일사상체제

의 약화나 개혁적 경제정책의 시행은 오히려 북한 정권의 강화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지도체제로의 회귀는 오히려 다양한 정치적인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되어 정권의 정당성을 높여줄 수 있고, 자본주의적 요소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은 오히려 정권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수령제가 고착되어 정치적으로 소외된 불만 세력이 많아지거나 개혁적 경제정책의 중단으로 경제영역에서의 실패가 지속되는 것이 혁명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체제의 서구식 변동이나 정권의 붕괴/교체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방향은 권력구조, 이데올로기, 경제정책 측면에서 그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것이 달성되었을 때 정권의 붕괴, 교체, 급변사태나 체제이행, 이에 기인한 한반도의 안정과 불안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분석과 이론적 전망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수령제의 약화나 개혁적 경제정책이 북한 정권의 붕괴 또는 교체, 서구식 체제이행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은 의도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끝으로, 최근 장성택 숙청 사례에서는 권력투쟁 배경에 있어 그 변화가 발견되었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일부 갈등에서, 김정은이 장성택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의 경우처럼 정치영역에서는 권력을 공고히 하고, 경제영역에서는 일부 개혁적인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를 국가경제영역으로 끌어안아 정권의 재정기반으로 삼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불만을 해소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을 낳는다.

[원고투고일: 2017. 7. 4, 심사수정일: 2017. 8. 17, 게재확정일: 2017. 8. 21]

주제어 : 권력투쟁, 숙청, 권력구조, 이데올로기, 경제정책, 장성택, 김정은, 대북정책

<Abstract>

An Analysis on The North Korean Politics and Purges from the point of Power Struggle : Focused on The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Backgrounds and Types of The Power Struggles

Yoo, Dong-Kung

Considering the general ideas such as totalitarianism, and Su-ryong(the supreme leader) system theory, there is no need to purge somebody in the North Korea. In December 2013, however, so-called 'the actual ruler', Jang Song-taek was executed horribly as a signal flare of the purge on the high ranking persons under the leadership of Kim Jung Eun. It doesn't make sense. If the power is overwhelmingly concentrated on the Supreme Leader, as described by the Su-ryong system theory, if all of the state apparatus are finely institutionalized to support his power, and if all of the ideologies legitimizing his authority such as Juche ideology are truly accepted by public and are prevalent in a society, and as described by totalitarianism, if all of the individuals and societies are under the surveillance of secret police, we can possibly assume that there are no different views, no challenges, and no purges. But if we look into the history of the North Korean regime, purges happened frequently. So we feel intuitively that we need different explanation about North Korean regime except the Suryong system or a totalitarianism, that is the perspective of the power struggle.

Under the awareness of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this article examines the four main purge cases of the North Korean regime: 1956, 1967, 1997 and 2013 purges throughout the history of this country, not to explain 'how much is this Suryong powerful?', but to explain 'why are these purges still happening?' under the article's analytical framework, three backgrounds of power struggle: 'an attempt to shift the power structure' - 'ideological debates' - 'economic policy confrontations', and drew the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is a question whether if there is a power struggle

in the North Korean regime or not, we can assure that there is a power struggle, the politics in the North Korea. There are different views, conflicts, adjustments, and compromises among persons and groups. Second, the power struggles have been brought to the surface in the appearance of purges without exception in times of internal-external turmoils, and as the results of purges, the political power of the Supreme Leader have been maintained and solidified. Third, the power struggle took place for various reasons, not only because of a political factor such as a power structure shift, but also because of the ideological disputes or the economic policy confrontations, and all the reasons have their own consistent conflict structure and logic such as regarding the power structure shift,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vs. Suryong system which is a powerful dictatorship, regarding the ideological debate, 'orthodox Marx-Leninism vs. Juche ideology', and regarding economy policies, 'communist economic policies vs. capitalist economic policies'. Fourth, something new pattern has been discovered in the recent Jang's purge case, that Kim Jong-un, the new Suryong, favored and adopted some reformative economic policies such as '6.28 measures' over against Jang Sung-taek's conservative policies, which implicate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might step into the Chinese style transition, embracing the market economy elements into the state economy through the reformative policies to secure the regime's financial resources, and relieve discontents of North Korean people regarding economic matters, meanwhile strengthening the power in the political sphere.

Keywords : Power Struggle, Purge, Power Structure, Ideology, Economy Policy, Jang Sung-taek, Kim Jong-un, Policy toward North Korea

